

내년도 최저임금 이번 주 결론… 관전 포인트는?

☒ 근로자위원 참석 ☒ 의결방식 ☒ 경영계 삭감안 철회

오늘 8차 전원회의 열고 심의
민주노총 추천위원 불참 가능성
의결방식에 공익위원 역할 주목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이번 주 결정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현 정부 들어 최소폭의 인상 가능성 이 점쳐지는 가운데, 인상 폭이 어느 선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만큼 이날 최저임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 밤샘 협상 끝에 결정돼온 그간 관행을 고려하면 14일 새벽의 결론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나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결국 이번 주까지 결론이 난다.

◆민노총 근로자위원 참석할까

13일 심의에서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참석 여부도 중요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되는데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자 이를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90원(1.0%) 삭감한 850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840원(0.8%) 인상한 943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일단 13일 전원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9일 퇴장 직후 “사용자위원들이” 마이너스 요구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저희는 더는 최저임금위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13일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노동계는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만 남아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막판 줄다리기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의결 방식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해 심의에서는 근로자 안과 사용자 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역대 최저임금의

결 방식을 보면 노사 양측의 안을 표결에 부치는 방식은 지난해와 같이 노·사·공익위원이 전원 참석한 경우 주로 사용됐다.

노사 양측이 힘의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세 대결을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캐스팅보트’를 준 공익위원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하지만 일부 위원 불참으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별도 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심의를 공익위원들이 주도하는 만큼, 표결을 어떻게 하든 공익위원 안이 곤 최종 결론이 된다고 봄야 한다.

공익위원들은 별도 안을 내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고 노사 양측이 그 범위 안에서 각각 수정안을 내도록 하는 등 중재를 통해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에서 의결되도록 유도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충분한 중재 과정 없이 노사 양

으로 중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 최소 인상안 낼까

경영계가 13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할지도 주목된다.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도 최저임금은 각각 2.7%, 2.8% 올랐다.

공익위원들도 최근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영계의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 내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소상공인 단체 등이 삭감안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삭감안에 부정적인 만큼 사용자위원들은 결국 최소 수준의 인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장외 여론전을 통해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해온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부적절한 워크숍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고 “(연합회는) 소상공인을 팔아 집행부의 이의만 취한다”며 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단통법 개정안 윤곽…장려금 규제 등 ‘주목’ “제주항공 인수 포기땐 이스타 1600명 실직”

소비자 반발, 실효성 등에 손질
공시지원금 규제 완화 등 논의
정부 vs 업계 ‘동상이몽’ 여전

‘호갱(어수룩해보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낚잡아 이르는 말)’을 없애려고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히려 호갱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단통법의 행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이후 나타난 유통구조 문제를 개선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7일 마지막 회의를 마쳤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이용자간 지원금 차별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 보조금을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도입돼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막아 통신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은 오히려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으며 원성을 높이고 있다. 오히려 다 같이 비싸게 휴대폰을 구입하게 돼 통신비가 더 늘어났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실효성도 논란이다. 최근 방통위는 5G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총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단통법



서울의 한 전자제품 전문매장 휴대전화 판매업체 모습. /연합뉴스

시행에도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편법을 저지르는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신형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불법보조금지급으로 시장 과열 상황이 반복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대 감경률 45%를 적용하며, 강력하게 법 시행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단통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다. 협회를 통해 의논한 바에 따르면, 현재 단통법 지원금 규제 완화와 장려금 규제 도입 등이 방향으로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번호이동, 신규

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고, 요금제에 따른 차등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동통신사는 공시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해야 하고, 유통점은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15% 범위에서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유지하는 기간을 기준 7일에서 3~4일로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협의체는 판매 장려금을 공시지원금과 출고가와 연동하는 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유통망별로 장려금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유통채널 간 또는 대리점 간 합리적인 차등 폭을 설정하는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업계와 정부의 이견 등으로 인해 실제로 어떻게 개선될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규제완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통법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이동통신사 간 치열한 경쟁이 재현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서 단말기 소비자들의 이해도 보호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협의체의 논의 내용을 참고해 실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 1면 ‘이스타 구원투수’서 계속

이같은 논란에 휩싸인 지불과 1년여 만에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매각을 둘러싸고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제주항공이 올해 초 이스타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지난 3월 9일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부터는 그나마 남아있던 국내선까지 아예 운항을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셧다운’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유동성 위기가 극심해져 2월에 일부만 지급했던 직원 급여를 3월부터는 아예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체불 임금 문제가 오히려 양사의 M&A에 큰 걸림돌로 부상했다.

◆제주항공 M&A 위해 기안자금 포기한 이스타만 ‘멘붕’

현재 이스타항공은 재무제표상으로는 생존 가능성이 회복한 상태다. 임금이나 항공기 리스비는 물론 임대료, 통신비(시스템 사용료) 등을 모두 체납하는 등 사실상 파산이 임박했다. 1분기 말 기준 부채는 2200억원에 이르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운항 중단으로 매달 250억원의 빚이 새로 쌓이고 있다. 올해 말이면 부채는 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수를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비용 절감을 위해 리스 항공기 18대 중 5대를 반납했으며, 계약직을 포함해 약 350여 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 인수를 위한 체질개선을 진행,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하면서 기간산업정자금 기준(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이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제주항공의 인수만 기다렸던 이스타항공은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또한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진행한 항공권 배분에서 제주항공에 대한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추진에 따라 특혜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5월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운수권 배분 결과 25개 노선 운수권 중 가장 많은 11개 노선을 배분받았다. 마카오 등 지역에서 이원5 자유권(현지 승객을 제3국으로 태울 수 있는 권리)과 중간5자유권(제3국을 거쳐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을 받은 항공사도 제주항공뿐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운수권을 배분할 때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전제하고 진행했을 것”이라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할 경우 후폭풍은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경그룹은 제주항공 인수포기로 이스타항공 직원 약 16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